

'혁신의 한솥밥' 결속, 지선 승리 다짐

혁신당 도당 신년 다짐식

조국 대표 "전북에서부터 지방정치 혁신 시작할 것" 정도상 도당위원장 "올해 지방선거, 진정한 도민 주권 세우는 전환점" 강조 화합의 비빔 퍼포먼스 진행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22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당원들과 '한솥밥'을 나누며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주관한 이날 '2026 신년 다짐식'은 형식과 위계를 내려놓고 지도부와 당원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당원 150여 명이 참석해 전북에서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비빔밥처럼 전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강력한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가겠다"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중앙의 혁신 가치를 전북 도민의 삶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는 전북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도민 주권을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혁신당 관계자들이 22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신년 다짐식'에 참석해 비빔밥 비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국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화합과 결속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 대표는 "비빔밥이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내듯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선거 승리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자"며 "전북에서부터 지방정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상징적 장면으로는 '화합의 비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조국 대표와 지도부는 전주 전통의 의미를 담은 대형 목기 앞에 모여 민생을 상징하는 재료들을 함께 넣고 대형 주

걱으로 비비며, 다양한 당심을 하나로 모아 지방선거 승리를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퍼포먼스 직후 참석자들은 "한솥밥 먹고 함께 땀 흘려 오라차"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속을 확인했다.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도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보성 청년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북 지방정치의 고인 물을 퍼내고 새로운 물결을 내는 데 청년들이 앞장서겠다"며 "기존 지방 권력의 독점을 깨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로 전북의 미래를 바꾸겠다"

고 선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에는 지도부가 직접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당원들에게 비빔밥과 콩나물국물을 나누는 '혁신의 배식'이 이어졌다. 지도부는 배식 후에도 당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지역 현안과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솥밥 공동체'의 의미를 실천으로 보여줬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신년 다짐식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 민생 현안 해결과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01만호 기자

안호영 의원 "코스피 5000 돌파 이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신뢰"

국회 기후에너지산업노동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은 22일 논평을 통해 "코스피 5000 돌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했을 당시 일부에서는 목표치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과장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섰다"며 "정치적 말이나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순간"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과제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성과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도 반도체와 미래산업,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가 확산돼야 코스피 5000이 숫자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도민 생활밀착형 복지체계 구축 선언

'도지사 출마'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를 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도민들의 생활 밀착형 복지체계 구축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밀착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선의나 관행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전북형 표준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해 공격 보상과 책임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복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수당·보급·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현장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와 행정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인회장, 부녀회장,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지역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공공 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 전달과 돌봄, 공동체 유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별로 수당과 보급 기준이 달라 박탈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동체 핵심인력에 대한 공격 보상체계 구축으로는 도내 14개 시군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장과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역은 월 3만원 수준이거나 아예 지원이 없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8조의 '지역봉사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실비 보상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합성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

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은 월 10만원, 총무에게는 월 5만원 수준의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회원 건강 확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로당 식사도우미 처우 표준화 추진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수행자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 식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별 수당 지급 현황과 보급 지급 여부를 도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권희성 기자

6월 7.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중앙과 소통하는 준비된 정읍시장" |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출사표

최도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민선 9기 정읍시장 선거 출사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행정관은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읍은 전북 4대 도시의 위상이 흔들리고, 인구 1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둔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야말로 지역소멸의 가속패달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원자력병원 병원 정읍 유지 △입시 커리큘럼 지원센터 운영 △0세 이동 2인당 보육교사 1명 배치 돌봄 제도 △시내권 비즈니스호텔 400객 이상 확보 △내장산 일대 정읍 생산 임산물들을 활용한 힐링스파 건립 △한우 공공도축장 건립 △정읍 한우 직판장 설치 △수색 관광객 소비금액의 5% 지역화폐 페이백 △스마트 혁신 행정 1등 도시 구현 △

방사성 동위원소 신약 산업 및 우주 방사선 부품 연구센터 구축 △전북 과학대학 도축 관련 학과 개설 등이 포함됐다. 최 전 행정관은 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상근 팀장으로 일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며 "지금 정읍에는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정책 중심의 선거를 제안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서 지역 발전에 위해 준비한 정책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로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선거 중심의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기 정읍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주 1회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01만호 기자 · 정음=김대환기자

'SRF 불허' 법원 판결... 진보당 도당 "전주시민의 값진 승리"

전주시민의 건강권을 둘러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자, 진보당 전북도당이 판결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연대와 투쟁을 높이 평가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준권희)은 22일 최현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SRF 불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주시의 SRF 사용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 행정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전주시민의 값진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과가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이 아닌, 시민들의 끈질긴 연대와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이 대통령 에너지 관련 발언 환영"

'도지사 출마' 민주 이원택 ·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발언에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으로 갈수록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입지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기반과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최근 전북도의 특화전략으로 제안한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재차 부각되고 있다"며 자신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국제에너지 도시 구성과 정확히 맞아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축 시대를 선두에서 열어가기 위해 전북을 국제 에

너지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발언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선언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임을 보여준다"며 "에너지가 싸고,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도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방균형발전이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 전환의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며 "특히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지금의 반도체·에너지·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송전선로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해 왔다" /권희성 기자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대표성 강화

민주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고려 요소로 추가하고, 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기초의원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지역 민주주의의 균간을 흐드는 문제"라며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 · 정음=김대환기자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서 건의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3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재생에너지(RE100)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조성 여건과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며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송전탑 갈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분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전북 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장기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탄소중립 정책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새만금은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공간"이라며 "정부가 국가산업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